

“영호남 하나되어 국가 균형발전 이끌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 - 국회의원 간 첫 상생협력 회의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김관영 지사,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당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날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단체장 · 부단체장과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 과제 및 입법 현안, 국회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0여 명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업상속 공제제

도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지역 간의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하고 “영호남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초고령사회 대응 ‘총력’

노인복지 예산 1조4470억원 편성...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응급 안전 서비스 ·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제공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전북자치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은 2024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만 2,19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88%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26.85%), 경북(25.54%), 강원(24.91%)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북의 13개 시군(전주 제외)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노인 복지 예산으로 1조 4,47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과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은 올해 들어 7만 8,841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형, 사회서

빙형,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응급 안전 서비스도 확대된다.

노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안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가 노인의 무료 급식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 단가를 인상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영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여가 활동 측면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경로당에 와이파이와 설치되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방한방비 지원이 이뤄져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2025년도 생활임금 1만2014원으로 확정

도, 작년 대비 1.7% 인상

전북자치도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에서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2024년 대비 201원이 상승하게 되며, 이를 월 급여(209시간)로 환

산하면 약 251만926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날 23일 개최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행감 대비 도민제안 창구 운영

3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 등 통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문승우)는 오는 11월(제415회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도민 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으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 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안하는 내용 등은 제외된다.

제안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열린 의회 - 행정사무 감사 제안), 방문, 우편(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이메일(remain123@korea.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안자의 신분은 보장된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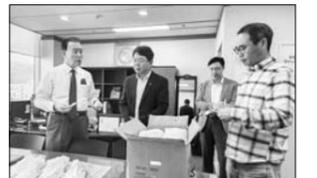
aT “중국산 배추 16톤 수입”

배추 수급 불안 대응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9월 지속된 폭염에 따른 배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배추 16톤(5,300포기)을 수입해 왔다고 밝혔다.

공사 훈포포 사장이 수입된 중국산 배추의 품위 점검과 식미 테스트를 직접 실시하고 철저한 안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에 들어온 배추 16톤(5,300여 포기)은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검



역·통관을 마친 후 aT 이천비축기지에 입고했으며, 조만간 식자재 업체나 외식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 방역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진안군 무진장축협 섬유질 사료공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한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방역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진안군이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농림축산검

역본부, 기후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협 섬유질 사료공장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한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로써 시군 및 관계기관들의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LA한인축제서 농수산물 우수성 알리다

전북 24개 농수산물 기업, ‘LA농수산물엑스포’서 우수제품 홍보
70만불 현장판매 · 샘플계약 5만불 성과... 도내 식품 경쟁력 증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2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농수산물엑스포’에 도내 24개 농수산물 기업과 함께 참가해 우수 제품을 홍보·판매했다.

이번 행사에서 70만불의 현장판매와 샘플계약 5만불의 성과를 거두며 큰 호응을 얻었다.

LA농수산물엑스포는 북미 최대의 한인 축제 부대행사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식류, 장류, 떡볶이, 김, 간편식 등 30여 개 품목을 선보였다. 이

번 박람회에는 지난 2022년 전북자치도지사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로 직접 나서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성과 중 하나다.

미국의 식품시장은 2025년까지 2조 4,0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K-FOOD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전북의 밀 키트 제품과 추어장, 계장은 현지 바



이어와 내방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익산의 병동 채소를 생산하는 A 기업은 현지 바이어인 B사와 약 5만 불 규모의 샘플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컨테이너 규모의 발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원에서 추어장을 생산하는 C사의 경우 북미 가장 큰 규모를 자

랑하는 아시안마켓에 하반기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박람회에는 참가한 A 기업 관계자는 “K-FOOD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국장은 “전북의 우수한 농수산물에 북미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와 추가 지원을 통해 전북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본소득 정책화 공동연구 착수

전북연구원 · 민주연구원 등 참여
지역사회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역 현안정책 기획 등 주내용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시작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지난날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광주광역시 광주연구원(원장 최치국), 전라남도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에 체결된 공동연구 협약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



지난날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식이 열렸다.

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의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추진해 온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농촌 활력과 지역 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청년·재난·농민 등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쇠퇴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의 기본권과 안전망 보장을 위한 혁신적 대응 방안으로 ‘농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지방소

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농촌지역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의 농촌 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원장(광주연구원)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구축, 남북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선 원장(전남연구원)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 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노후유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